



봄바람에 흔들리는 보리 이삭 24일 제주시 내도동 한 밭의 보리 이삭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강희만기자

도지사 정무라인 선거 개입 의혹 파문

단체대화방 “언론사 여론조사 시 오 지사 지지” 유도
도지사 경쟁 후보들 “철저한 수사와 규명 필요” 공세
경찰 조사 불가피... 오 지사 “적절한 조치 취하겠다”

오영훈 제주지사 측근으로, 정무라인을 구성하는 일부 비서관과 특별보좌관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경선을 앞두고 뇌관으로 떠올랐다. 제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경쟁 후보들은 이번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수사를 촉구했다.

전날 도내 모 방송사는 오영훈 도정 전현직 정무직 공무원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을 입수해 보도했다.

“음면 동지”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이 대화방에는 총 4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언론사 여론조사 시 오 지사를 선택해달라는 내

용의 이미지 등을 주고 받았다.

본보 취재 결과 대화방에 참여한 전현직 정무직 공무원은 비서관 3명과 특보 1명 등 최소 4명이다.

이 가운데 A비서관은 지난해 9월, B비서관은 올 2월 9일 각각 사표를 제출해 현재 민간인 신분이지만 논란의 대화방은 지난해 말 개설됐기 때문에 A비서관을 제외한 B비서관을 포함해 지난 23일 사표를 제출해 사직 절차가 끝나지 않은 C비서관,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D특보 등 나머지 3명은 공무원 신분으로 관건 선거 운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D특보는 대화방에서 “승리를 위하여 화이팅”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관권 선거 의혹이 불거지자 경쟁 후보들은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김명호 진보당 제주지사 예비후보는 24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 조직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닌 불법 관권 선거이자 여론조작 시도”라며 “누가 지시했고 누가 알고 있었는지, 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는지에 대해 도지사가 즉각 답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르면 25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혀 이번 의혹은 경찰 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오 지사와 경선을 치를 더불어민주당 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과 위성곤 국회의원도 각각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오 지사 측을 겨냥했다.

문 의원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

다”며 “민주당 도정하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유감”이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번 의혹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파괴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왜곡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성명을 발표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오 지사는 즉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 징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의혹에 대해 입장을 묻는 본보의 질문에 “(대상 자들에 대해)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 지사 측 선거준비사무소도 “관련 의혹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없도록 사법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이상민·김채현기자

2026 제주의 선택-도지사 예비후보 특별대담 / 오영훈

“뿌린 씨앗, 이제 수확의 시기만 남아”

6·3지방선거 재선 도전을 선언한 오영훈 제주지사는 24일 “민선 8기 도정을 운영하며 미래 비전 설계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고 이제는 수확의 시기만 남았다”며 도민들이 도정의 성과를 곧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관련기사 7면

오 지사는 한리일보·KCTV제주방송·삼다일보·헤드라인제주 공동 주최로 이날 KCTV 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특별대담에서 민선 8기 도정에 대해 “성과를 보이는 측면도 있고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제주가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씨를 뿌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지사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주를 복지 기본사회로 구축하고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녹색 문명 제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 가치 돌봄과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또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모든 구성원에게 바람·햇빛열을 지급하고, 에너지 생산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예비후보 등록 시점에

대해선 “도정 책임을 최대한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주4·3 추념식 이후 적절한 시기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제1호 공약으로 추진했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2026년 7월 출범을 포기하고 도입 논의를 민선 9기로 넘긴 것에 대해선 “당장 시행하기엔 여론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명확한 정책 설계로 제주시 쪼개기 논란 등에 대한 도민 사회 우려를 달아야 했는데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단 오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이 국정과제로 반영된 만큼 재정·조직 설계 영역이 마무리되고 민선 9기 도정에서 논의를 재개하면 2030년쯤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2공항 갈등 문제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는 오는 9월쯤 중점평가사업으로 조기 지정하고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BRT 도입과 관련해 일부 불만이 있지만 버스 수송분담률이 높아지고, 버스 속도가 향상됐다며 정류장 공사 등이 마무리되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빠르면 올해부터 시행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부터 유급휴일로 지정돼 왔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정부는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꾼 데 이어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국회·부미현기자

초등생 유괴 의심사례 발생, 학교현장 ‘긴장’... 4면 / 강정항 크루즈 준모항, 중·일 갈등 직격탄... 6면

FTA활용이 수출기업의 경쟁력!
FTA활용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FTA활용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다면?

제주상공회의소 FTA통상진흥센터

각종 원산지증명서(C/O) One-Stop 서비스 제공!

상담

신청

발급

제주 FTA통상진흥센터
☎ 064) 759-2577

2026년 중점 지원사항

- 기업 현장방문 FTA 컨설팅
- 해외 바이어 현지 FTA 컨설팅
- 전문가 수출 컨설팅
- 원산지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지원
- FTA 설명회 및 교육
- 수출기업 수출·판로 지원프로그램
- FTA 상담실 운영